

[정책토론회]

석탄화력발전과 대기오염실태 및 전력 패러다임 전환 모색 토론회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안희정 도지사가 7월 7일 ‘석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감축 국민 건강을 위한 투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하기 바로 전날인 7월 6일 오전 7시 15분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장관과 한전 발전자회사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노후 석탄발전 처리방안 및 향후 석탄발전 운영 개선방안을 주제로 조찬 대책회의를 가짐. 그리고 같은 날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 10기 폐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함.

○ 안 지사의 기자회견 바로 전날 대책회의를 하고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은 명백히 의도를 지녔다고 볼 수 있음. 일종의 물타기.

○ 이날 발표한 대책도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 10기 폐지’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6월 3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중 발전, 산업부문과 거의 유사해 특별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음.

○ 특히 제목으로 뽑은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 10기 폐지’ 역시 6월 3일 발표 당시에 특별한 대책이라고 볼 수 없는 미봉책이라는 비판을 받았음.

○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 10기 폐지’ 대상 발전소 중 서천화력 1, 2호기는 이미 지난해 확정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으로 마치 새로운 대책인 것처럼 생색내기.

○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해서 많은 이들이 현재 계획된 신규 석탄화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착각을 일으켰으나 실제로는 4~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20기 석탄화력 발전소는 예정대로 건설.

○ 폐지되는 석탄화력은 10기에 대부분 20만~50만kW급인 반면 계획된 신규

석탄화력은 모두 20기에 50만~100만kW급이다. 폐지로 인해 줄어드는 발전량은 335만kW이지만 새로 가동될 발전량은 1810만kW이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저감장치 개선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으나 용량이 6배가 늘어나는데 이를 어떻게 줄인단 말인가.

○ 특히, 석탄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충남지역에 대해서는 타지역 대비 강화된 오염물질 저감목표 제시하고 ‘17~’18년 집중적인 환경설비 보강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16. 7월에는 발전사-정부간 자발적 협약을 추진한다고 했다.

○ 충남연구원 이인희 연구위원의 2014년도 자료에 따르면 2008~2012년 6월까지 황산화물 109건, 미세먼지 70건, 질소산화물 135건 초과 배출. 그러나 부과금은 19억 4700만원에 불과.

○ 충남도의 경우 5년간 2억원의 부과금에 해당하는 먼지와 황산화물 초과 배출. 보령화력 1억2300만원, 당진화력 4300만원, 태안화력 2600만원, 서천화력 30여만원 순.

○ 즉, 현재 법적 기준치를 초과 배출하더라도 부과금이 극히 적어 오염물질 저감 유인효과가 낮을 수밖에 없음

○ 법적 기준치를 초과 배출하더라도 제재수위가 낮아 발전소의 저감 유인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적 강제성이 없는 발전사-정부 간 자발적 협약으로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가 의문시될 수밖에 없음.

○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2항에 “발전소의 질소산화물 감소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제33조에서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발전소에서 초과 배출하더라도 시도지사의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 명령 대상에서도 제외됨

○ 현재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으로 인해 석탄화력이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줄이기는커녕 지금보다 더 늘린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방증함.

○ 석탄화력으로 인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는 노후 발전소 폐쇄와 함께 기존 설비의 저감시설 강화 등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계획된 신규 석탄화력을 백지화해야 함. 전기가 남는 상태에서 또 발전소를 짓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임. 충남에 계획된 당진에코파워 1, 2호기와 착공하지 얼마 되지 않은 신서천화력은 철회해야 함.